

[종합]

나주혁신도시 땅 399만7천㎡ 공급

국토해양부, 공동 주택·이전기관 용지 등 조성 승인 ... 개발 본격화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혁신도시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을 승인,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승인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전체 공급대상 2천710만6천㎡ 가운데 87.4%(2천370만9천㎡)의 토지공급을 승인했다.

이번에 공급승인된 토지는 공동주

택용지 596만㎡(134필지), 단독주택용지 271만㎡(6천248필지), 학교용지 87만㎡(63필지), 이전기관부지 423만㎡(105필지)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체 공급대상 431만7천㎡ 가운데 92.6%(399만7천㎡)의 토지공급이 승인됐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 119만㎡를 비롯, 이전기관용지 75만5천㎡, 단독주택용지 55만7천㎡, 학교부지 15

만2천㎡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토지공급 승인율이 96.6%로 가장 높았고, ▲울산 92.5% ▲강원 92.4% ▲경북 87.8% ▲대구 80.9% ▲경남 74.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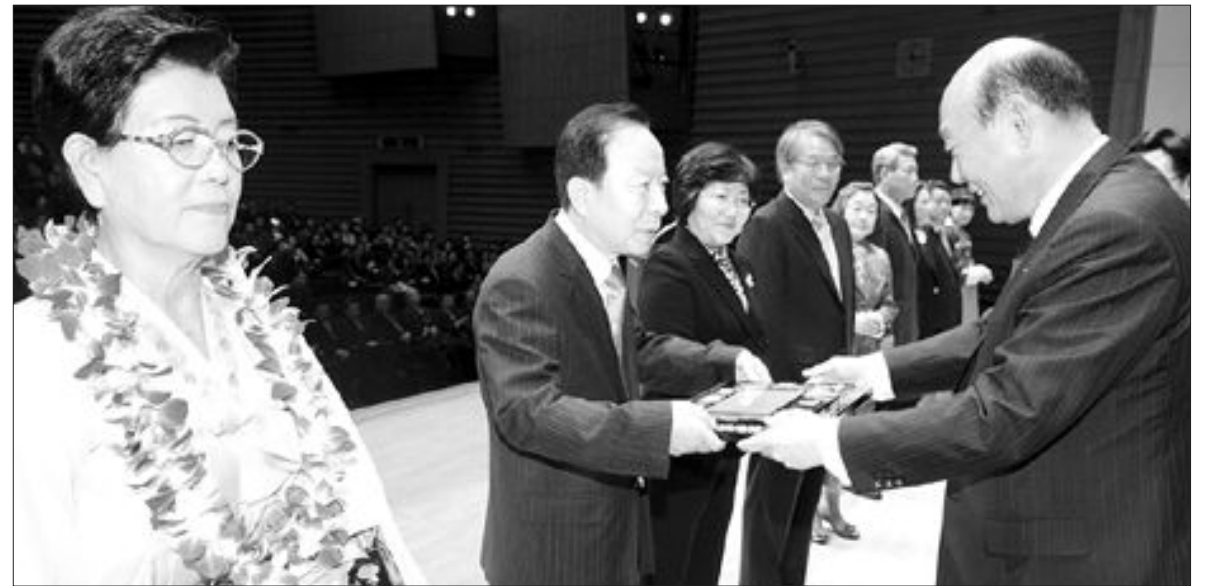
국토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지와 대행개발예정지에 대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전남에는 올해 8만9천㎡의 국민임대주택지가 공급되며, 총 공동주택지(119만㎡) 가운데 6만6천㎡가

대행개발 형태로 조성된다.

대행개발은 조성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비중 일부를 땅으로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외환위기 직후에도 이 방식이 채택됐다. 사업 시행자로서는 향후 조성된 토지가 미분양될 우려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한편 이번 승인에서는 현재 실시계획이 수립중인 부산 혁신도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산업용지 등이 제외됐다. /최경기자 choice@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부문별 수상자는 박순달(71·전 화정남초교장·사회봉사), 임재완(58· 전남대 교수·학술), 신남수(64· 전남대 교수·예술), 구자연(54· 동신교사·체육), 김 석(44· 금강기전 대표이사·지역경제진흥)씨 등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계 빚 갚을 능력 갈수록 악화

소득 10% 이하 상환에 사용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은 증가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올해 말 기준 1.53배로

2007년 말 1.48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 수치는 2004년 1.27배, 2005년 1.35배, 2006년 1.43배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1.53배)은 미국 1.32배, 일본 1.11배(2007년 기준)보다는 높고 영국 1.78배보다는 낮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늘어나 가계 가처분소득 대한 이자지급 비율은 작년 말 9.4%에서 올해 6월 말 9.8%로 상승했다. 가계 소득의 9.8%는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 수령

당정, 가입기간 합산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지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날 2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지만 연금이 연계돼 있지 않아 오랫동안 근무해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형평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당정이 연계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현재 '국민연금과 각 지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지역연금 제정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연계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지역연금은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 재직하다 일반 기업으로 옮겨 5년 근무할 경우 현재는 연금 수령 자격이 안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해서 근무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민주,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조사

광주·전남 광역의원 3~4명 대상에

사실 확인 땀 흘릴 조치

민주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와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 대한 검증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민주당 핵심 당직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당내에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농수산식품위, 행정안전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취합,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일부 전직 국회의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일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3~4명의 광역의원들이 부당 수령 의심 대상에 오를 것

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심 사례에 대해 현지 실사와 본인 해명 등을 통해 정확히 시비를 가리는 한편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출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 당내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또 民生경제는 없구나

여수박람회 기본 계획 보완점은?

"시설 활용 구체적 방안 있어야"

여수시민들은 2012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등의 사후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학동 거북선공원에서 시민 255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기본계획 가운데 가장 보완해야 할 것이 뭐냐'는 물음에 47%가 '사후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박람회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25%로 뒤를 이었으며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를 구체화해야, 시민 참여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4%였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 꿈의 도시 여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50%가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32%가 '사회간접자본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호남 단체장 '광역경제권' 공동 대응

5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등 정책협의회

정부의 일방적인 '5+2 광역경제권' 사업 선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호남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가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의 호남권 단체장인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가 오는 5일 전남도청에서 호남권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특히 시·도 지사는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사업에 대한 재선정이나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가 '5+2 경제권 사업' 현안을 시·도정책협의회 공식+2 광역경제권의 호남권 단체장인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가 오는 5일 전남도청에서 호남권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특히 시·도 지사는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3개 시·도의 공동 현안이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 일반대학원
석사: 기계공학과/디지털경영정보학과/항공미용학과/한방제약개발학과/사회복지학과/음악학과/스포츠과학과
박사: 기계공학과/디지털경영정보학과/항공미용학과

■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유아교육전공/상담심리전공/영양교육전공/미용교육전공/특수교육전공
* 교육대학원 비학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중

■ 보건경영대학원
간호학과/방사선학과/대체의학학과/언어치료학과/물리치료학과/의공학과/건설링학과/호텔조리학과

■ 원서접수
2008년 11월 3일(월) ~ 11월 14(금)

■ 원서접수방법
☎ 대학원교학실 - TEL : (062) 970-0046~7 FAX : (062) 970-0044
☎ 인터넷접수 : http://ipsi.nambu.ac.kr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광주첨단과학단지 내) 남부대학교 대학원교학실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ambu.ac.kr)

남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홍보처
2008년 12월 19일 ~ 24일 062) 970-0114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09학년도 신입생모집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80명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가.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60% 이내
▶ 6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간부, 8년 이상의 교직자, 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나. 일반전형: 필답고사(행정학 및 법학 중 택일) 및 면접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특별전형: 2008. 11. 3(월) ~ 11. 18(화)
나. 일반전형: 2008. 11. 3(월) ~ 11. 25(화)

3. 연락처
가. 행정대학원 행정실 ☎ (062)530-2206
나.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acnu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모집과정: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00명, 문화관광전공 00명, 계 30명

지원자격: 가. 응시계열 출신학과(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나.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2009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석사학위과정 2008.11.4~11.11 1차: 2008.11.27 2차: 2008.12.4~5 2008.12.23

문의: 행정실 : 062) 530-4062~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ulture.chonnam.ac.kr) 참조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